

AI 윤리원칙 공식 제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24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20년 AI 윤리기준을 잇는 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 기반 공통 기준입니다.

01

3대 가치와 7대 원칙 제시

AI 전 생애주기에서 모든 주체가 실천해야 할 공통 기준입니다.

02

이용자도 실천 주체로 명시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처음 포함했습니다.

03

구속력 없는 자율규범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각 분야 윤리기준·지침의 토대가 됩니다.

초안 공개에서 공식 제정까지

- 2025.12.01 과기정통부·KISDI, 작업반·자문단 구성 및 윤리원칙 제정 추진 착수
- 2026.03.13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본격 착수 브리핑
- 2026.05.29 작업반·자문단이 마련한 윤리원칙 초안 공개, 대국민 의견수렴 개시
- 2026.08.14 과기정통부, 윤리원칙 대토론회 개최·각계 의견 153건 접수 결과 공유
- 2026.08.24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심의·의결

다음 단계

NEXT MILESTONE

과기정통부·KISDI가 사례 중심 해설서, 분야별 자율점검표, 윤리교육 교재를 마련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효력인가

적용 대상

SCOPE

AI를 개발·제공하는 기업과 이용자를 포함해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됩니다. 각 분야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 역할을 합니다.

규범 성격

STATUS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범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153 건

초안 공개 후 접수된 각계 의견
산업계·시민사회·학계·국민 참여

원칙이 담은 3대 가치

인간의 존엄성

모든 사람이 목적
그 자체로 존중

사회의 공공선

편익이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인류의 지속가능성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편익

점검 및 모니터링 포인트

- 01
 - 과기정통부 보급 예정인 분야별 자율점검표·사례 해설서 입수
 - 자사 AI 개발·서비스 프로세스 반영 준비
- 02
 - 7대 원칙별 자사 AI 제품·서비스 부합 수준 진단
 - 원칙별 내부 점검 체계 구축
- 03
 - 분야별 윤리기준·지침으로 구체화되는 동향 모니터링
 - 실질 규제로 전환되는지 지속 확인

남은 쟁점

업계 일부는 자율규범이 사실상 사전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법적 규제 필요성을 줄이는 완충지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법정책의 변화,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

— ISSUE TRACKING

— POLICY INSIGHT

— CUSTOM REPORT

로섹션 입법정책 모니터링

LAWSECTION.AI.KR

본 자료 및 정보는 입법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